

#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최후의 보루' 보험까지 해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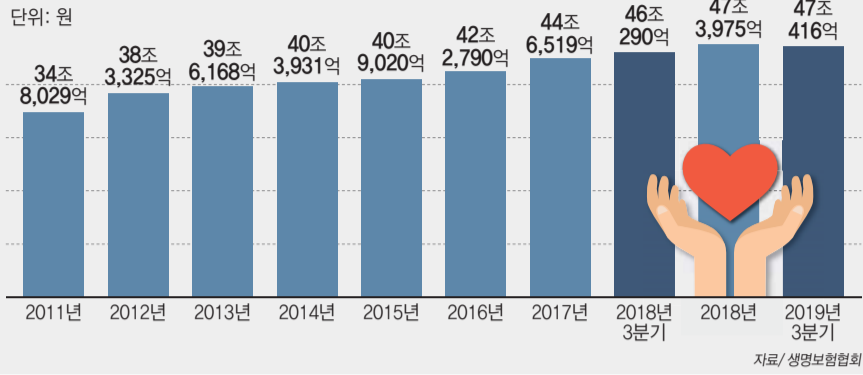
## 보험업계, 코로나19 한파

보험납입금 부담에 원금손실 감수 '급전' 필요에 보험약관대출 늘 듯  
상위 3개 생명보험·5개 손해보험사 1~2월 해약환급금 4.6조, 6.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보험업계에 드리우고 있다. 팍팍해진 살림살이 탓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원금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을 깨는 가입자가 늘어난 것. 시장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중심으로 보험약관대출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상위 3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1~2월 해약환급금은 4조5615억원으로 전년(4조2874억원)



생명보험사 보험약관대출금 추이



대비 6.4% 증가했다.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한 지난달 기준 3대 생보사와 5대 손보사의 해약환급금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22.7% 늘었다.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했을 경우 돌려받는 돈을 말한다. 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무조건 불리하다.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운영비, 해약공제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가입자에게 환급되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만큼 보험은 금융상품 중에서도 최

후의 보루'로 꼽힌다.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계약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방증이다.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24개 생보사의 누적 해지환급금은 24조469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8조4652억원, 2016년 20조118억원, 2017년 22조1086억원, 2018년 25조8135억원으로 매해 증가 추세다.

같은기간 국내32개사 손보사의 누적 장기해약환급금은 11조815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장기해약환급금이 11조8702억원으로 최고치를 나타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다시 최고치를 찍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보험 중도해약뿐만 아니라 보험약관대출도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보험업계가 보험 해지 대신 보험약관대출을 권장하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객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줘 떼일 위험도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로서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  
보험약관대출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50~95%) 내에서 대출해 주는 계약이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빚이 있어도 간편한 심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린다. 당장 필요한 자금을 까다로운 은행보다 보험사를 통해 융통하고 있는 셈.  
지난해 9월 말 기준 생보사 보험약관대출금 규모는 47조416억원으로 2018년 같은 기간 46조290억원 대비 1조126억원(2.2%) 늘었다. 특히 지난해 대출규제 강화로 보험약관대출로 몰리면서 보험약관대출 규모는 2018년 47조3976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험을 해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험 해약보다는 보험약관대출을 권하고 있지만 높은 금리 등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9@metroseoul.co.kr

## 경총,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건의

경제·노동 입법 개선과제 국회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치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기업의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총37페이지 분량의 건의서에서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개선과제를 추려 소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향까지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및 완화도 함께 요구했다. 경총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폐지해야 하며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 분야 입법과제도 건의서에 담았다.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고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매년 이뤄지는 보험료율 결정 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2022년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상시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식당 '줄폐업'... 서울 경기침체 현실화

소비자태도지수 3년만에 최저  
서울연구원 '추가하락 가능성 커'  
폐업 음식점·치킨집 1600곳 달해  
서울 지역의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사람들이 주머니를 단자 글로벌 금융위기와 메르스 사태, 내수 부진까지 견뎠던 서울 식당들도 줄폐업하고 있다.  
◆서울시민 경제전망 '부정적'  
2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소비자태도지수는 2019년 4분기 93.3에서 올 1분기 82.8로 10.5포인트 줄었다.  
소비자태도지수는 서울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의미한다.  
서울연구원은 "소비자태도지수가 80대를 기록한 것은 2017년 1분기 이후 3년



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서울 지역 치킨집·카페 폐업 9% 늘어  
올 3월 서울 지역에서 폐업한 음식점, 치킨집, 카페는 전년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식 업황이 나빠진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이 가시화되면서 문을 닫은 식당들이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  
이날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서울시 식품위생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1~20일 1600곳이 폐업했다. 작년 같은 기간 1468곳이 폐업한 것과 비교하면 9%(132곳)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달 들어 사라진 점포 중에는 2008년 이전 개업해 같은 자리를 지켜오던 식당 114곳도 포함됐다.  
최근 20일 동안 폐업한 식품위생업소 1600곳을 업태별로 보면 한식집이 17.1%(274곳)로 가장 많았다. 카페·커피숍 108곳, 치킨집·호프집 83곳, 경양식집 73곳, 분식집 62곳, 기타 휴게음식점 55곳, 일식집·횃집 41곳, 중식당 21곳, 편의점 20곳이 문을 닫았다.  
/김현정 기자 hjk1@

## "시간 갖고, 공론화 거쳐야 할 문제"

>> 1면 '개학 또 연기...'서 계속  
9월 신학기제를 처음 시행하는 첫해에는 예년보다 2배에 달하는 학생들이 입학하게 된다. 이 학생을 위한 복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 충원과 학급 증설이 불가피하다. 당해연도 3월 입학자를 9월로 미루든, 차년도 입학자를 이전 년도 9월로 앞당기든 신입생 수는 기존 두 배가 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15년 1월 발간한 '9월 신학년제 실행방안'에 따른 수치다.  
기업 채용, 국가 고시 일정 등 사회 전체의 일정 조정도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국가 회계 연도와 학교 회계 연도

불일치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도입 시 충분한 준비 부족 등도 우려 사항이다.  
'9월 신학기제'를 제안한 김 도지사도 이를 당장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언급했다. 김 도지사는 "9월 신학기로 바뀌면 학교 학사일정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취업을 포함한 사회의 많은 분야가 영향을 받게 된다"며 "매년 단계적으로 조금씩 늦춰서 2~3년에 걸쳐 도입을 검토하는 등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당장 올해 도입을 위한 논의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

## "만기 1년이상 남았다면 기다려보는 것도"

>> 1면 '날개없는 추락...'서 계속  
또 전체 ELS 잔액(48조6296억원)의 약85%가 유로스톡스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ELS와 DLS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더라도 만기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원금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기 때 주가나 유가가 더 크게 하락한다면 손실규모가 훨씬 커진다. 중도 상환을 할 지, 만기를 기다려 볼 지가 헷갈리는 상황이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투자자의 투자 시점, 손실 규모에 따라 해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크(PB)는 "만약 만기가 1년 이상 남았다면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을 조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경험상 작은 위기는 평균 1년,

금융위기 같은 큰 위기는 3년 정도면 회복 사이클이 도래한다"면서 "금융위기 때도 3년 만기를 채운 고객 대부분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챙겨갔다"고 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녹인 ELS는 통상 기초자산의 증가가 최초기준 가격의 65% 이상이면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하지만, 노숙인 상품은 최초기준 가격의 8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등 조건이 더 엄격할 것"이라면서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에 여유가 없다면 조기 상환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